

화폐교환조치의 파장과 전망 - 정치경제학적 분석 -

박 형 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서론과 요약

북한은 2005년부터 보수적 경제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시장에 대한 억압, 국가통제의 강화 또는 재수립 시도 등이 그러한 정책이다. 이는 2009년에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와 같은 고전적 동원정책의 시도로 나타났다. 또한 11월 30일에는 ‘화폐교환조치’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화폐교환조치의 기본 목적은 시장 및 민간 부문의 약화, 그리고 내부 세력 재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 정권은 일시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당장 그리고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매우 크다. 당장 경제가 큰 혼란에 빠졌고 장차 국영경제를 소생시켜 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볼 때, 이는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쉽지 않을 시도가 될 것이다. 나아가 주민의 급증한 불만을 관리해야 한다.

경제적 차원에서만 보면 이번 화폐교환조치는 북한경제 내부에서 생명력을 입증한 민간경제 부문을 단번에 약화시키고, 비효율과 낭비, 그리고 관료주의 온상인 국가경제 부문을 장차 소생시켜 내고자 하는 정책선택을 보여준다. 이는 현명한 정치가라면 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민간경제 약화 효과가 국영경제 소생의 긍정 효과 보다 시간상으로 앞서고, 확실성에서 더 분명하며 예상 강도에서 더 크기 때문이다. 화폐교환조치 때문에 북한경제가 추가적 경제침체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사회적 의미도 크다. 이번 조치는 정권과 주민관계를 단숨에 크게 악화시켰다. 이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주민의 정권에 대한 우발적·조직적 반대를 활성화시키는 도화선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2. 보수적 정책 흐름과 화폐교환조치

북한의 경제정책은 2000~2004년간 개혁적 성향을 보여주었으나 2005년부터 보수적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화폐교환조치가 단행되었다.

북한의 개혁정책은 2001년부터 정책적으로 본격 준비되었다. 이는 2002년 7.1조치로 시행되었다. 개혁은 2003년 9월 박봉주가 총리로 임명되면서 한층 탄력을 받았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박봉주는 고무되었고 그는 2004년 중반 이후 보다 대담한 경제개혁을 위한 정책시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대담한 개혁시안은 특권경제(=당과 군 산하 경제)의 기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05년 초부터 당과 군의 권력기관이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다. 이후 박봉주는 무력화되었고, 궁극적으로 2007년 4월 실각했다. 2005년 초부터 2007년 4월까지 지도부 내부에서 개혁정책의 향배를 둘러싸고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크게 보아 개혁정책에 관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세력이 대결했다. 2000~2004년간 개혁 국면은 특권경제(당경제와 제2경제, 특권 회사경제)의 이익에 반했다. 반면 내각경제와 그에 고용된 노동자, 장마당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협동경제 농민의 이익과 부합했다. 2005년부터 시작된 개혁반대와 공세의 중심에는 세 가지 세력이 있었다. 군수공업관련 세력 및 당경제 세력은 개혁 추진이 자신의 이익을 침해할 것을 반대했다. 당기관은 내각에 빼긴 권한을 회복하고자 했다. 공안기관은 '비사회주의 현상'의 만연을 우려했다.

2005년 이후 전반 정책방향을 보면 이렇다. 우선 보수파는 시장에 대한 적대감을 확실하게 들어내었다. 시장은 무질서와 비사회주의 현상의 온상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장악력은 강화되고 시장은 억제되어야 했다. 각종 시장억제책은 시간이 가면서 점차 강화되었다. 2008년 말에는 2009년부터 종합시장을 과거식 농민시장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이 발표되기까지도 했다. 또한 2009년에는 '150일 전투'와 '100일 전투'라는 고전적 동원경제 수법의 활용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2009년 11월 30일 화폐교환조치가 단행되었다.

3. 화폐교환조치의 목적과 파장

〈목적〉

이 조치의 목적은 경제와 주민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을 일거에 급증시키면서, 현시적 및 잠재적 충성세력을 포상하고 잠재적 반대세력을 징벌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조치는 일시적으로 만족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그 비용과 부정적 효과도 매우 크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성과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문제는 보다 영속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이번 조치와 후속 조치가 단기적으로 국영부문을 강화시켜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들에게 자생력까지 불어넣어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조치는 일반 주민이 장마당에서의 장사 및 여타 생계활동을 통해 축적한 재산을 화폐교환조치라는 명목으로 강탈했다. 이 조치로 북한 주민의 상당 부분이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수 주민의 좌절과 분노를 초래했다. 또한 이 조치는 고통의 원인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있다는 것을 뚜렷이 각인시켜주었다. 앞으로 주민의 정권에 대한 저항이 보다 노골화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시적 성과〉

우선 일시적 성과를 보다 자세히 보자. 그 골자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권의 경제와 주민에 대한 통제를 일시적으로 현저히 강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둘째, 중하층 주민을 '출근집단'과 '비출근집단'으로 나누고 전자에 일시적으로 큰 혜택을 주어 상호 이간하는 것이다.

먼저 첫 번째 사항을 보자. 정권은 화폐 발권력 행사를 통해, 신화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이를 정권의



중점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차적으로 국가의 계획체계를 되살리고, 국영기업 및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재강화하는 데 투입될 것이다. 국가는 회복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국가자재 공급망과 국영사업망에 물건을 공급하게 될 것이다. 국가는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금속 및 화학과 같은 선행산업에 자금을 일차적으로 투입하여 이들 산업을 살리려고 할 것이다. 이는 내년 중에 상당한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 재산과 생계활동을 박탈당한 다수의 북한 주민은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구화폐 액면 수준으로 신화폐 임금이 지불된다면, 복귀한 노동자는 과거 시장별이에 준하는 월급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다수의 국영기업은 개선된 에너지 상황 및 노동력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중하층 주민을 ‘출근집단’과 ‘비출근집단’으로 나누어 정치적으로 이간하는 효과에 대해서 보자. 이번 화폐교환조치의 일부는 “공장·기업소에서 받게 되는 생활비는 종전의 금액수준을 새로운 화폐로 보장받게 될 것”¹⁾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당국은 ‘화폐교환조치’가 “근로자 이익옹호와 생활안정 향상이 목적”²⁾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직장 출근율이 높고 월급 의존율이 높은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이 집단에 속하는 직장을 보면, 시당간부, 보위부, 안전부, 검찰소, 재판소, 군대성원 등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집단은 월급 보다는 각종 부정부패와 연루한 부수입 의존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폐교환조치의 보다 직접적인 포상대상은 공장 노동자 중 출근 노동자 집단일 것이다. 공장의 경우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동률이 20% 정도로 알려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론상으로 80%의 노동자가 공장 바깥에서 생계를 구해야 한다. 물론 80%의 노동자가 모두 8.3노동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시장에 적응하여 비교적 성공하는 부류와 그렇지 못한 부류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가 존재하지 않아 왔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시장 비적응 중하층 주민을 포상하는 효과가 있다.

〈경제면에서 성과의 한계와 부정적 파장〉

그러나 이상의 변화만으로 일반적 국영기업의 경영상황과 자생력이 영속적으로 갱생되리라고 믿기는 어렵다. 그 이유로 여덟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래 이제까지 국영기업의 설비, 산업연관 및 경영구조가 파괴되어 있다. 이 때문에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해준다고 해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을 조직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급증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국영기업 경영 정상화 노력이 일시적인 캠페인이 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복귀하는 노동자는 국영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과거 국영기업은 상당 부분의 노동자를 8.3노동자로 방출하여 인원 삭감의 구조조정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를 보면, 이들이 상당수 재복귀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는 이들에게 적어도 두세 달은 실적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화되면, 생산정상화 문제와 잉여노동력 문제가 풀 수 없는 과제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많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국영기업은 경영개선을 위해, 또한 개별 노동자는 자신의 복지를 위해 과거로 복귀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업은 잉여 노동력을 방출하고, 노동자는 형식상 여전히 공장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상 공장 바깥에서 스스로 벌어먹어야 한다.

셋째, 많은 국영기업이 원래 계획체계가 요구하고 있던 종목과는 현저히 다른 업종들에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국영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동안 자력생존을 위해 내부경영구조를 변경시켰고, 대외 거래에

1) 강이록, “조선에서 새 화폐 발행, 교환사업 진행,” 『조선신보』, 2009년 12월 4일자.

2) 강이록, “<화폐교환조치> 근로자 이익 옹호와 생활안정 향상이 목적,” 『조선신보』, 2009년 12월 4일자.



서 시장활동에 매우 깊숙이 관여해왔다. 따라서 이들 국영기업을 계획체제로 복귀시키자하는 경우, 지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발견된 기존의 경영환경 및 생존체계를 파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가가 자금력이 있고 생산지령을 내린다 해도, 계획수행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국영기업이 계획수행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을 것이다. 국가가 자금력에서 우세를 회복했다 해도, 이러한 '오합지졸'을 이끌고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전국가적 분업체계를 실효성있게 단기간에 복구한다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넷째, 이번 조치의 성공은 국가자재 공급망과 국영사업망이 일거에 정상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상당부분의 자재 구입과 생산물 판매가 국가 개입 없이 기업 간에 또한 기업과 시장 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생활품의 80~90%가 시장거래를 통해 유통되었다. 이 체계를 일거에 국가체계가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사실 북한당국은 그 동안 끊임없이 국가배급망 또는 국영사업망의 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다. 2005년 10월경 식량전매제의 도입 시도가 본격적인 시초이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시장이라는 경쟁자를 아주 죽여 버리는 극약 처방을 택했다. 그런데 이러한 화폐교환조치는 시장거래를 틀어막았을 뿐, 국영사업망을 통한 대대적 상품 공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의아스럽다. 그 자명한 결과는 경제의 대혼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영사업망의 경쟁자는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국영사업망 스스로를 원활하게 가동시킬 능력이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이는 얼마 있어 시장이 다시 소생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이는 기업 대 기업 간의 자재 및 완성품 거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섯째, 북한의 신화폐가 의미있는 교환 및 가치저장수단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할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북한에서 계획체제 또는 국가지령에 의한 자원배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에서 화폐는 계획의 계산단위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이러한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주는 것은 국가지령이지 화폐 액면 표시의 다소가 아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구화폐는 계획의 계산단위가 아니라 취약했지만 시장에서 구매력을 입증한 경성화폐였다. 그 이유는 계획체제가 붕괴하여, 국가 자원 배분 지령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실질자원 배분이 시장기구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동안에도 일반적으로 국영기업 간의 주요 거래를 포함하여 북한화폐 기피현상이 존재해왔다. 신화폐는 이러한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계획 및 배급체계가 명목상 지배하면서도 실제로는 기능하지 않는 체제가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은 틀어막고, 생활비는 옛날 액면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영사업망이 물자를 충분히 공급해야 의미가 있다. 아마도 그렇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화폐교환조치가 생활비를 과거 액면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마도 구매할 물건이 부족할 것이다. 일시적 화폐환상이 될 뿐 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제에서는 화폐의 구매력이 아니라 권력을 활용하여 자원배분 지령을 행정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자원을 차지한다. 결국에 이번 화폐교환조치는 부정부패를 통해 부족한 물자에 접근할 수 있는 자만이 더욱 혜택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낸 것이다. 즉 화폐가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연성화폐라고 한다. 이를 보면 취약하지만 경성화폐였던 구화폐보다 연성화폐인 신화폐가 더욱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나 인민폐같은 경성화폐 선호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시장은 물론 불평등을 조장한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조장하는 불평등 보다는 더 참을 만하다.

여섯째, 북한에는 국가의 계획체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준-공공기업이 다수 등장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당·정의 주요 권력기관이 기관 자력갱생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그것이다. 이들 회사는 계획체제의 구속을 받지 않으며, 시장거래를 기본으로 하여 운영되는 기업이다. 이들은 또한 모체 기관의 권력과 특권을 배경으로 일반 국영기업이 몰락한 가운데서도 활성화되어 있던 기업이다. 이들은 군·당·정의 주요 공적 권력기관의 사적인 자회사이다. 따라서 권력기관을 건드리지 않고 이들 기업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독자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권력과 자금력, 그리고 독점



대외무역권을 활용하여 국영기업을 사실상의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어 왔다. 이들은 상당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들의 기득권은 보장되었을 것이다. 또는 권력과 특권을 이용하여 구화폐를 전액 신화폐로 바꾸는데 성공했을 지도 모른다.

일곱째, 북한당국은 화폐교환이 필요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통화팽창’을 들고 있다. 이는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다. 즉 북한에서는 은행예금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발행된 화폐가 환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저금의 비밀보장과 지급보장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또한 상업은행 체계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 두 조치가 발표되지 않은 것은 의아스럽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화폐교환을 통해 일시적으로 유통되는 화폐를 줄였다고 해도, 국가로부터 방출된 화폐가 환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는 계속적으로 통화 발행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 또한 내화이든 외화이든 영토 내에 존재하는 여유자금이 국가적 규모에서 생산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은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또 다시 화폐교환조치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주민의 여유자금을 환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

여덟째, 이상의 이유로 국가의 경제 장악력은 경제 전반에 불규칙한 강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히 선행산업 관련 공장과 군수공장의 가동력은 상당한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 일반 국영기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영기업의 기왕의 적응상태를 단숨에 크게 바꾸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중앙의 강화된 압력을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로 인해 눈에 보이는 시장인 장마당에서의 상거래만 타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시장관계와 민간자본에 의존하여 발전하고 있던 수산업, 자체탄광, 각종 건설업, 운수업이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민간돈주와 공공기관의 결탁에 의해 운영된다는 의미에서) 이들 준민간·준공공 기업이 북한 내에서 생산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단·중기적 파장〉

다음으로 보다 사회정치적 차원에서 이번 조치의 단·중기적 효과를 보기로 한다. 가장 큰 효과는 첫째, 북한 내부 특권계층, 특권기관 산하 회사의 경제력이 급등했다는 것이다. 둘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이다. 셋째,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표현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사항은 이번 조치로 인해, 큰 이득을 본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특권계층 및 특권기관 산하 회사들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돈을 사업 또는 저축자금으로 하고 있던 장마당의 중소상인 및 일반 주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 대신에 달러와 인민폐 등 외화 보유를 기반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중상층 집단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주었다. 이들도 북한화폐 부문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았겠지만, 외화자산의 상대적 가치 급등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만약 중국인들이 소지한 구화폐를 전액 신화폐로 교환해주기로 했다면, 이들도 이번 교환조치에서 큰 이득을 보는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특권층과 특권기관 회사들의 자산은 일시적으로 급등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앞으로 장마당 지배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사회적으로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현재 여건상 소비재 및 일부 생산재, 생산용역 및 완성품과 관련하여 시장거래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 일시적으로 위축되더라도, 조만간 복원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조만간 시장확대가 재개되는 경우, 특권층과 특권기관 산하 회사는 매우 유리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먼저, 화폐교환조치 이전에 상권을 장악하고 있던 중소상인들은 대량적으로 몰락 또는 약화되어 버렸다. 따라서 특권층과 특권기관 회사는 기존에 이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역을 매우 손쉽게 장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화폐교환조치



가 중하층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이들이 제공하는 생산요소의 가격을 낮추어 버릴 것이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국영기업에 재고용될 것이지만, 중기적으로 다시 시장으로 재방출될 수밖에 없다. 그 때 이들은 싼 가격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시장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 구매자는 특권층과 특권기관 산하 회사가 될 것이다.

셋째, 이번 조치는 많은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즉 중앙정부, 또는 김정 일, 또는 김정은이 될 것이다. 이는 과거와 다른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다. 1990년대에는 정권과 주민이 동반 몰락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독재국가에서 주민은 중앙의 지도자는 선량한데 눈앞의 탐관오리가 잘 못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화폐교환조치로 인해 자신에 몰아다친 재앙의 원 천이 중앙정부, 또는 그 누구의 결정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북한 주민은 북한 당국에 대해 적극적 저항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엄청난 좌절감과 분노는 우발적 충돌을 발생 시킬 개연성을 훨씬 높여주었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우발적 충돌은 그리 어렵지 않게 진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은 발상의 전환을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북한 주민은 눈앞의 탐관오리뿐만 아니라, 중앙의 정책결정자가 궁극적으로 문제의 원천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과정을 보다 가속적으로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

4. 결론과 요약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북한경제는 2010년 상당한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이며, 여기에 내부 불안이 증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내외 환경과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번 화폐교환조치는 국영계획부문을 살리는 것이고, 시장 및 민간 부문을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자의 긍정적 효과와 후자의 부정적 효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강력한가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볼 때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화폐교환조치는 중하층 주민 상당 부분의 여유자금을 축소하여 대다수 주민의 구매력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시장관계 및 민간 자본의 뒷받침을 받으며 생산 및 고용효과도 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생력을 보여주었던 여러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종합시장의 도소매, 수산업, 각종 건설업, 운수업, 자체탄광 등 소규모 채취산업 등이 그것이다. 화폐교환조치는 이러한 산업을 죽이는 대신에, 그 동안 사실상 도산상태였으며,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을 상실했고, 온갖 비효율과 낭비, 그리고 관료주의의 온상이었던 국영기업을 살려내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는 자명하다. 민간 부문 축소효과는 당장에 나타날 것이고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국영부문 소생의 효과는 상당한 시간차를 가지고 나타날 뿐 아니라, 그 긍정적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 그 자명한 결과는 상당한 경제침체 유발이다. 이미 어려운 북한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번 화폐교환조치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의 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일거에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일시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나 앞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매우 크고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매우 어렵다.

이번 조치는 국가의 경제 장악력, 기업과 노동에 대한 통제를 일시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국영기업과 노동자는 계획해체 상황에 적응해왔고 특권기관 회사와 같이 계획에 포괄되지 않는 독자 기업도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역행해서 국가 통제력을 연속적으로 강화시키자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아마도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층에 크게 타격을 주었지만, 외화를 소지한 특권층과 특권기업 산하 기업에 큰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들은 앞으로 시장이 재확산되는 시기가 오면, 시장 지배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조치는 많은 개인이 당하는 좌절과 재앙의 근원이 중앙당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단기적으로 좌절과 분노 때문에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면,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에 대한 보다 의식적 저항이 강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